

건강칼럼

‘황달에 오심, 구토 증상까지’ 봄철 급증하는 A형 간염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3-5월에는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대인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외부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신고된 A형 간염 환자는 총 35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47명)과 비교하면 2.5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재 양성률이 낮은 30, 40대에 비해 젊은 층이 늘었다.

A형 간염 바이러스(HAV)가 간에 침범해 염증을 일으키면서 간 조직을 죽게 만들거나 변성을 일으키는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걸리게 되는 수인성 질환이다. 주변에 감염자가 있다면 전파될 위험이 크며 직장이나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집단 감염이



손창영

사회병원 제1내과 부장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15-50일(평균 28일)의 잠복기를 갖는 A형 간염 초기에는 발열과 전신 피로감, 근육통이 생기고 식욕 부진, 울렁거림이 나타나 감기 몸살, 장염, 위염 등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들이 심화되면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황달(안구의 흰자위나 피부 등이 노랗게 보

이는 증상)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증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심해질 수 있으며 간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급성신부전이나 급성해장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고 드물게는 사망할 수 있다. 한편 A형 간염은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제가 없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와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아이들의 경우(만 1세 이상) 6~12개월 간격으로 총 2회를 접종하고, 40대 미만의 성인 중 예방주사를 맞은 경험이 없다면 항체 검사 여부에 상관없이 A형 간염 예방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임신 전에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 A형 간염을 포함한 B형 간염, 풍진 등의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식 자리에서 음식을 나눠먹거나 술잔 돌리기 등의 행위는 지양하며 개인용 식기류를 사용해야 한다. 물은 되도록 끓여 마시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며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독자제언

다문화가정도 함께 누릴 행복추구권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냉대 받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편견과 배타성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 정서적인 소외감을 경험하고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또래 집단과의 첫 만남장소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외모적 특성으로 인해 놀림을 받게 된다. 심지어는 등교를 거부하기까지 한다. 더불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미숙한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데서 오는 심리적 갈등요인으로 인해 비행이나 일탈로 표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맞춤형 범죄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폭력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주기적인 학교폭력 설문조사 실시로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치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하고 있다.

다문화지원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적극 힘쓰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다. 어느 나라든 다민족 국가로 변해가고 있고 이에 각 나라마다 여러 인종이 융화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들이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도 이들 다문화나 탈북민이나와 좀 다르다고 편견과 방패를 보인다면 희망찬 미래는 요원하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우리사회가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자세라고 본다. 따라서 이제부터 시간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내 가족이나 친구처럼 관심과 사랑으로 대한다. 그들도 언젠가는 행복이 가득한 자유 대한민국 건설의 든든한 일군이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 백옥섭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거리 메운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대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리카스의 라 카를로타 공군기지 인근 거리에 반정부 시위대가 몰려들어 시위하고 있다. 마리오 폴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원하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적전도 할 수 있다'라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노동절, 노동존중 정신 되새기며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전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와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노동절은 1886년 8시간 노동을 요구한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서 유래한다. 국내에서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총창립일인 3월 10일에 행사를 치른다. 1994년부터 국제기준인 5월 1일로 날짜를 바꿔 기념하고 있다. 시장 자본주의의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지만 현장에서 팔리는 노동의 가치는 우선 존중돼야 한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정책 등은 노동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이다. 기본 인권과 생존권의 견지에서 정당성과 명분을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정책 추진 속도를 놓고 원금 논란이 일며 수용에 일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지난 시대에 노동자 권익을 소홀히 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기위기관 속에서 세부 방법론과 속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

만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큰 여정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노사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 모두가 공생하는 길인 이이다. 방향은 정해졌으나 노동존중의 사회로 가는 길은 멀다. 회사의 규모와 노동조합의 역량에 따라 조합원 처우에 차별이 크게 현실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노사관계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국내 최장기 롯데 노사분규 해결과 쌍용자동차, KTX 조합원들의 복직에서 보듯하다. 노동자 보호의 사계가 이어지고 노동계를 보는 인식과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고용주의 제대로 된 노동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노조도 변화한 환경에 부합하는 대화와 상생의 노동운동을 펼칠 길 바란다. 우리의 노동존중 정신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도 게을리 말아야 한다. 단결권 등 노동자 권리 강화를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가 얻어낸 역사적 사건

지난달 말, 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힘겹게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돼 30일간의 논의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2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하는 반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 설치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수사지휘가 금지되지만,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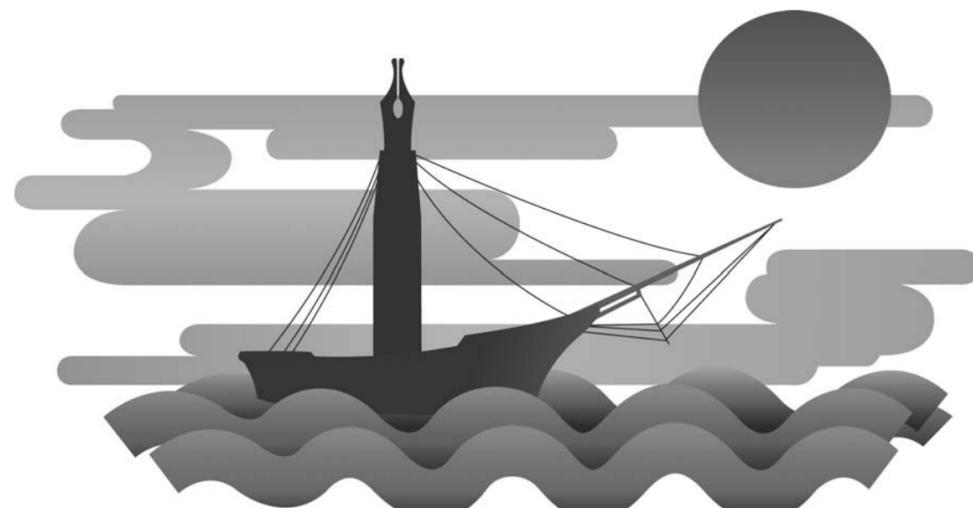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통제할 수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역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 내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해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했다. 선거제 개혁이나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대표적인 사항들이다. 이번 선거제 및 공수처 설치 등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지정을 거쳐 정식 입법된다면 이번 국회의 험난했던 일정 국회가 얻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인정할 만하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